

# 경제失政 장하성을 중국대사에? ‘회전문 주도인사’ 비판

최저임금 인상 골자 현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총괄자 정평나 바른미래 “실패인사 자리보존”



안경 고쳐 쓰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주중국대한국대사에 내정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이 매우 차가운 모양새다. 야권에서 장 전 실장의 주중대사행은 ‘회전문 인사’로 규정, 매서운 비난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를 시작해 현 정부까지 주중대사직에는 정권실세가 자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전 실장에 대한 비난이 유독 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 눈에 띄는 정치권 주장이 존재했다. 장 전 실장의 주중대사 내정 시기가 안 좋았다는 것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노영민 대사(현 청와대 비서실장) 때에 비해 장 전 실장에 비판이 많은 까닭은 시기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며 “장 전 실장이 주중대사로 내정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시기에는 우

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부정적으로 진단한 언론 보도도 함께 나왔다”고 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부정적으로 진단한 언론 보도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4일 발표한 ‘세계거시전망 2019-2020’과 연관이 깊다. 무디스는 우리나라

의 올해 및 내년 경제성장률이 2%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진단했다. 앞서 무디스는 작년 11월 세계거시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3%, 2020년 2.5%로 각각 진단한 바 있다. 무디스는 보고서를 통해 의미심장한 지적을 가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부정적으로 진단한 이유 중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은 것이다. 무디스는 “고용성장의 부진은 최저임금 탓”이라며 “중소기업계가 임금인상을 경쟁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추진된 경제정책의 일환이다. 그리고 장 전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현 정부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의 총괄자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그 뿐 아니라 장

전 실장은 작년 5월 15일 고위당정청협의 회 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없다”고 장담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장 전 실장이 주중대사에 내정된 것은 일부 여론에 부정적인 시각을 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거세다. 김경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장 전 실장이 주중대사로 내정됐다. 실패한 인사의 자리까지 보존해주는 문재인 정권 의리가 눈물겹다. 장 전 실장은 소득격차·실업률을 재난수준으로 만들고 경질됐다. 외교도 망치려고 작정한 모양이다. 제발 염치 있는 대통령이 되라. 지금이라도 외교전문가를 찾길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장 전 실장에 대한 야권(주재국 동의)을 신청했고, 주재국 동의가 이뤄지는 즉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 MB-류우익, 박-권영세, 文-장하성 ‘주중대사’ 거쳐야 정권실세?

“짧은 임기 반성해야”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주중국대한국대사직으로 내정된 것으로 최근 알려진 가운데, 주중대사직은 역대 정권마다 핵심인사들이 거치는 요직인 모양새다. 정권 핵심인사의 주중대사행은 문재인 정부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중대사직에 핵심인사들을 배치했었다. 장 전 실장의 주중대사행이 그렇다. 외교계와 정계에 따르면, 장 전 실장은 주중대사로 지난 4일 내정됐다. 또 정부는 장 전 실장에 대한 야권(주재국 동의)을 신청했고, 주재국 동의가 이뤄지는 즉시 임명할 예정이다. 장 전 실장 주중대사행은 정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장 전 실장의 주중대사행은 ‘문재인 정부가 핵심인사를 보내 중국을 중시하고 있음을 중국 측에 전달하고자 함’이라는 게 중론이다. 장 전



(왼쪽부터) 류우익 전 청와대 비서실장, 권영세 전 주중대사,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실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정책을 총괄한 인물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대 주중대사 역시 현 정권 핵심인사가 자리했었다. 노영민 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렇다.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실제 노 실장은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원조 주류인 이른바 ‘일노삼철(노 실장·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호철 전 청와대 비서관·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로 꼽혔다.

역대 정권을 살펴봐도 주중대사직은 핵심인사들이 줄곧 거쳤다. 박근혜 정부 때 주중대사를 지낸 권영세 전 국회의원과 이명박 정부 때 주중대사를 지낸 류우익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를 방증한다. 정계에서 권 전 의원은 ‘친박 인사’로, 류 전 실장은 ‘친이 인사’로 각각 정평이 난 인물들이다. 실제 권 전 의원은 검사 출신이자 제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이력의 소유자다. 류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임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이전 정부만 살펴봐도 주중대사직에는 정권실세들이 자리했다. 문제는 정권실세들의 임기가 매우 짧다는 점이다. 반면 주대한민국중국대사인 추귀홍 대사는 2014년에 부임해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정치권이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우승준 기자

## “국민, 독가스 마신다… 대책 마련을”

“미세먼지 韓·中 정상회담 열어야”

출근을 위해 천호대교를 건너던 전모(여·27)씨는 5일 스모그와 미세먼지에 덮인 하늘을 보고 “미세먼지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할 지경 아니냐”고 호소했다. 전씨는 또 “정부가 집집마다 미세먼지 대비용 마스크를 보내줘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두 아이를 둔 이모(여·33)씨는 “이젠 아이가 외출할 때 마스크를 항상 챙긴다”며 “답답하다는 말 대신 마스크 생활에 익숙해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씨는 “아이가 하고 후 ‘엄마, 나 오늘 놀이터에서 놀 수 있어?’라고 묻는다”며 “자라는 아이가 마음껏 숨 쉴 수조차 없이 크는 걸 생각하니 뿌연 하늘만큼이나 가슴이 먹먹하다”고 전했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사상 처음 닷새 연속 발령될 정도로 악재이지만, 당정과 야당은 서로 ‘네 탓’하며 손 놓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를 포함해 국민의 건강·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장을 맡은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미세먼지 무정부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도 나름대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등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면서도 “국민이 보기엔 아무것도 하지 않



서울시가 5일 오전 1시를 기해 초미세먼지(PM-2.5) 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대한애국당 인지연 대변인이 마스크를 쓰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미세먼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은 “역대급 미세먼지 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도대체 어디서,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또 “미세먼지를 주요 의제로 한중 정상 회담을 열어 할 말은 하는 정부가 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매년 저감장치 보조금 확대 등 제도를 제시하고 실천하라”고 강조했다. 인지연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의 경우 이날 검은 마스크를 쓰고 기자회견을 하며 “국민은 지금 독가스 공기를 마시고 있다”고 시위했다. 인지연 대변인은 또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날아오는 미세먼지 주의 경보 문자를 받을 때마다 국민은 속만 터지고 분노가 치민다”고 항의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 與野 ‘연동 비례제’ 놓고 신경전

더민주, 50% 적용 주장  
야3당, 100% 실시 고집

여야 합의로 국회는 정상화됐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싸고 시작 전부터 신경전이 이어진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년 21대 총선에 적용하려면 6일 기준으로 나흘 안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 속내가 제각각인 여야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할지 관심을 모은다.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현재 한국 선거제도는 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는 소선거구 제도와 비례대표제를 함께 운용한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기준 지역구 의석은 253개, 비례대표 의석은 47개였다. 연동 비례제를 도입할 경우 총선에서 정당 지지율이 A당 60%, B당 30%, C당 10%를 기록했다면, A당은 180석, B당은 90석, C당은 30석을 가져간다.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 1표를 던



여야 5당 대표들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4일 국회 사랑채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기 위해 함께 사랑채로 걸어오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합뉴스

지는 ‘1인 2표’ 투표 방식이지만, 소선거구 당선 수와 무관하게 전체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받은 의석 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할 경우엔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운다. 외국의 경우 독일과 뉴질랜드 등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의 장점은 ‘사표’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3%의 정당 지지율을 받은 당도 국회의원 9명을 배출할 수 있다. 여당이나 제1야당에는 불리한 요건이기도 하다.

앞서 여야는 국회의원 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 비율을 3대 1로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합의하는 모양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75석에 대해 연동 비례제를 50%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3당은 100% 실시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석대성 기자

## 1월 연근해어업 생산량 12만톤… 22%↑

해수부, 삼치 86%·오징어 58% 증가  
해양수산부는 2019년 1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지난해 1월에 비해 22%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 2월 28일 공표한 어업생산통계에 따르면 올 1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2만3000톤으로 작년 1월의 10만1000톤 보다 2만2000톤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 생산량은 멸치 2만4543톤, 고등어 1만6327톤, 오징어 9855톤, 갈치 3108톤, 참조기 559톤 등이다.

주요 어종별 증감을 살펴보면 삼치(86% ↑), 오징어(58% ↑), 청어(53% ↑) 등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고, 갈치와 전갱이는 전년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참조기(37% ↓), 붉은대게(22% ↓) 등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오징어는 따뜻한 수온(1.0~1.5℃)의 영향으로 어근의 남하 및 회유가 지연돼 우리나라 동해남부해역에 어장이 형성되면서 지난해 1월에 비해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